

# 사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9일부터 11일까지 공천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속초-고성-양양선거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713명이 신청했으며, 15일 마감한 새누리당은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972명이 신청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천을 받을 경우 정당의 기본표를 흡수해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자 1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천은 후보자나 정당 모두 필수적인 코스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각 정당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공천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천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이르면 20일경에 우선 경선에 참가할 2명을 정한 뒤 이들 2명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지역

의 경우 3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이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론조사가 2월 중순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천자가 바로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양당 모두 선거일을 한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당초 입장을 바꿔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금 정당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의 가슴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공천자 발표가 항상 선거일이 임박해서 발표되다보니 후보자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준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 확정 시한을 법으로 정해 이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어왔으나, 정치권

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보통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자기 비용을 내고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일시, 몇 % 차이일 경우 인정하느냐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누가 몇 %를 받았는지는

만이라도 여론조사 결과 몇 %인지 기본적인 수치만이라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정당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공천 방법도 정당마다 다르다.

과거 당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반영돼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공천'이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대부분의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도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경선에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의 부작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 공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다.

## 정당공천 보다 투명하게 해야

감춘 채, 공천자만 발표해 탈락한 후보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당에서는 1위와 2위 후보의 차이가 적어서 2위 후보자가 반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방식을 논의할 때 '1%라도 이긴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정당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후보자 본인에게

## 기고

## 생명의 길을 열어 주세요

우리는 예전부터 '집에 불이 나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설에 불과하다.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 주위에는 나도 모르게 화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 '얼마 내 집이, 내 직장, 내 가족이~' 하는 안전 불감증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다.

또 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승용차가 지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2011년 6월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1,813만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으로 약 1대당 2.77명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속에서 살고 있다.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으로 출동 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주차,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각종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을 요구하는 1분1초가 중요한 사건사고 출동이 늦어져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나로 인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2011년 6월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11년 12월9일부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나 구급 차량 등 긴급출동 중인 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양보가 힘든 편도 2차선이상인 경우 차선 양쪽으로 벌려줘 긴급차량이 차선 가운데로 안전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목길,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할 때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소방차전용'이라는 구획선이 있다. 그곳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최소 활동구간으로 이 전용구간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가기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달려가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피해 달라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김명섭 지방소방위 간성119안전센터 2팀장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 직 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에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